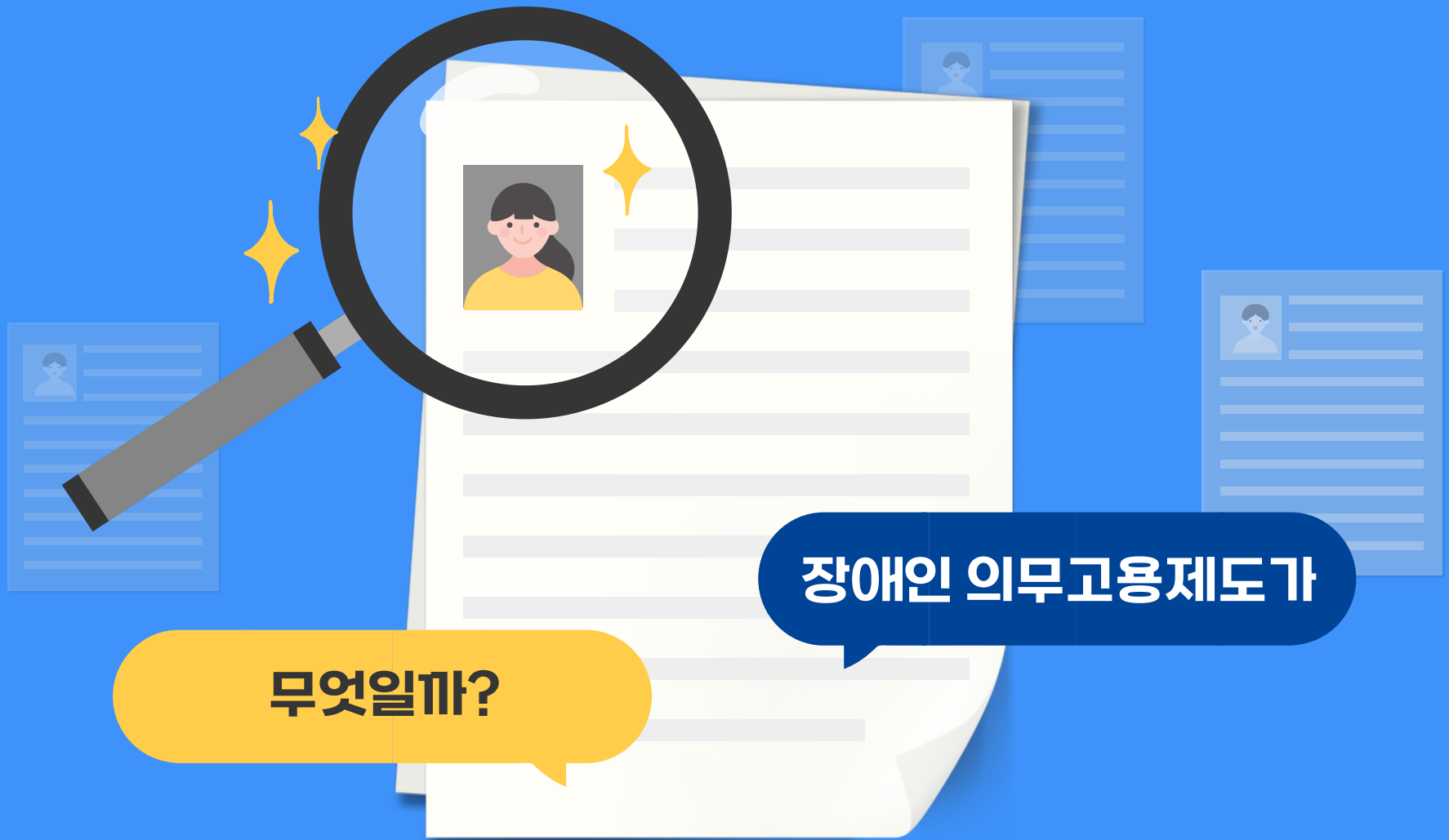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무엇일까?

장애인의 고용의무제도

한림대학교 인권서포터즈 3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의무제도



다음의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및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공공기관

-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출자기관·출연기관

사업주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 실태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현황. ©고용노동부

지난 10년간 공공·민간 모두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은 여전히 낮은 수준.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기회, 차별 없는 고용이 당연한 사회를 위해 지금,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차별 없는 고용

공정한 기회